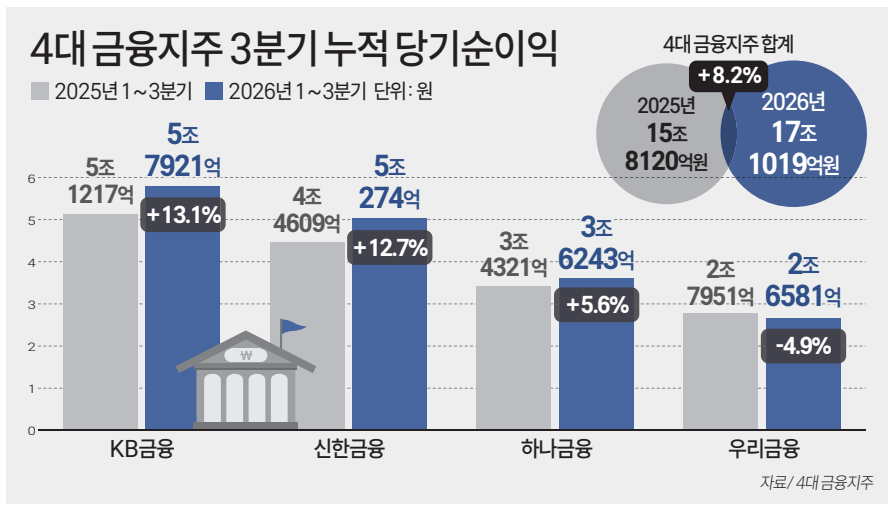
4대 금융, 3분기 누적순익 17조 '신기록'… 전년비 8% ⬆

KB, 전년대비 13% 증가한 5.8조
이자이익 성장, 수수료 확대 성과
신한, 이자·비이자이익 고른 성장
하나, 누적순익 역대최대실적 달성
우리, 보험사 인수 기저효과 순익⬇



자료/ 4대 금융지주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까지 17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이자이익의 안정적인 성장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확대가 더해지면서 금융지주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다. KB금융은 누적 순이익 5조8000억원에 육박하며 연간 순이익 6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7조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899억원(8.2%)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금융지주별 누적 순이익은 KB금융이 5조79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금융 5조274억원, 하나금융 3조6243억원, 우리금융 2조6581억원 순이었다.

KB금융은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5조792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이자이익 성장과 수수료이익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특히 순수수료이익이 4개 분기 연속 1조원을 웃돌면서 비이자 부문의 수익 창출 능력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연간 순이익 6조원 달성까지 2079억원만을 남겨두게 됐다. 올해 4분기 실적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6조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도 3분기 누적 순이익 5조27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7% 성장했다. 순이자마진(NIM) 개선과 자산 성장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수수료이익 확대 등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신한금융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8.2% 증가했다. 대손비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그룹 전반의 이익 성장세가 이어졌다.

하나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3조6243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하며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산관리(WM)와 투자은행(IB) 부문의 수수료이익 증가가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하나금융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수수료이익은 29.8% 늘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우리금융은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65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금융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두며 그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두 분기 연속 분기 순이익 1조원을 넘어섰다. 기업대출 중심의 자산 성장과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도 각각 4.5%, 13.9% 증가했다.

4대 금융지주의 실적 개선에는 이자이익뿐 아니라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등 비이자 부문의 성장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수료이익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금융지주들의 수익원이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지주별 실적 증가 폭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두 자릿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하나금융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고, 우리금융은 지난해 일회성 이익에 따른 기저효과로 누적 순이익이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역기업 맞춤형·단계별 금융 지원… 성장동력 확보

5대 지방은행 '지역 동반성장'
정부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
지역 中企 전략산업 육성 적극투자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린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소매금융 매출 성장에 제동이 걸린 만큼, 지역 중소기업과 전략산업 육성에 적극 투자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리는 '생산적 금융'을 정책 목표로 추진 중인 만큼 각 지방은행도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본점을 둔 5대 지역은행(부산·iM·경남·광주·전주)은 하반기 핵심 경영전략으로 일제히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 하락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지역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에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BNK금융의 부산은행은 지역기업에 성장단계별 금융 지원을 공급하고 조선·해운 등 지역 주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은행은 기존 대출 중심 영업을 산업 생태계 지원형 금융으로 확대 및 전환하고, 방산·조선·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린다.

대구·경북에 영업 기반을 둔 시중은행 iM뱅크는 지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기존 거점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별 현안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정책 목표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과의 동행'을 강화한다.

JB금융의 광주은행은 지속되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기업금융 공급을 늘린다. 또한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단지 조성 목표에 발맞춰 대응도 본격화한다. 전북은행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대출을 확대하고 지역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해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등 한계기업을 지원한다.

최근 지방은행들이 지역 기업 중심의 대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전년 대비 1.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의 1.7%보다 0.2%포인트(p) 낮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총량을 연간이 아닌 월별·분기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부동산 규제와 맞물린 대출 증가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한도는 지난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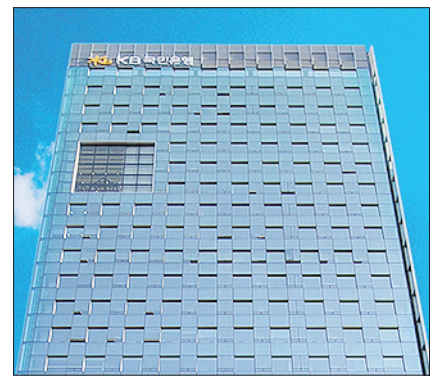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도 각 지방은행이 기업금융 비중을 늘리는 이유다.

정부는 작년 9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주담대 등 부가가치가 낮은 대출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및 비수도권 기업으로 재배치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일환으로 지방 소재 기업에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지방금융 확대목표제'를 마련했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에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각 지방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지방은행의 한 관계자는 "생산적금융의 목표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리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지방은행들은 대형 시중은행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지역 내에 갖춰진 인프라도 많은 만큼, 각 지방은행들은 생산적금융을 새로운 영업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KB국민은행

GPU 파이낸싱 금융주선 확보

브룩필드 추진… 12.6조 규모

KB국민은행은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브룩필드(Brookfield)가 추진하는 약 12조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사업의 금융주선권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딜은 국내 최초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파이낸싱이자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금융주선이다. 전체 사업 규모 가운데 약 10조 7000억원을 대출로 조달한다. KB국민은행은 대표 주선기관으로서 금융주선을 총괄한다.

해당 사업은 브룩필드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GPU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네이버클라우드에 장기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조달된 자금은 GPU 및 관련 장비 취득과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딜에서 금융구조 설계부터 주요 금융조건 협의까지 금융주선 전반을 주도했다. 특히 사업 특성과 단계별 투자 일정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구조를 마련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금융주선에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한다. AI 컴퓨팅 인프라의 장기 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AI 인프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FIU, 가상자산·사기 등 금융범죄 대응방안 모색

파리 OECD본부 FATF 총회 참석
회원국, 범죄차단 국제공조 확대 한 뜻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38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 총 40개 회원국, 200여개 네트워크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사기, 스캠 단지 등 진화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합의했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최근 사기·스캠·제재 회피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부문의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집중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고 후속 점검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차 라운드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준(권고 15)을 평가받지 않았던 회원국들도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오는 2027년 6월 총회에서 발표된다.

국내에서도 이번 점검을 통해 가상자산 및 사업자 부문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법제 운영의 효과성을 검토·보완해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FATF는 초국경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을 분석한 신규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이동 구조와 전문화된 범죄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FIU는 신종 스캠 범죄의 주요 수법과 함께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모범사례로 공유했다.

회원국들은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초국경 범죄조직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모니터링 강화, 의심거래 탐지부터 자금 동결 및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과정에서의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상호평가보고서 논의를 통해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및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리의 중요성도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도 제5차 상호평가에 맞춰 관련 법률 정비 및 감독·검사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금번 FATF 총회는 자금세탁방지 미이행국 평가에서는 이란과 북한, 미얀마는 기존의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으며,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는 4개국이 제외해 18개국으로 조정했다. 차기 FATF 총회는 오는 2027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FATF 기준이행 미흡 국가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스캠 단지가 확인된 국가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기술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터폴 및 UNOD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시행 중인 민관 신속 정보공유 및 의심거래 정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보공유 과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